

대구 혁신도시 조성 '배거덕'

보상금·이주대책등 주민과 마찰...올 9월 착공 미지수

대구 동구 신서·각산동 일대에 추진되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보상금을 놓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9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혁신도시 조성계획이 당초 예정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대구시와 대구 동구청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도재준 대구시의원 주최로 토지공사 용지팀, 시 건축주택국장, 구청 도시건설국장, 해당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반야월 초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인 혁신도시 주민설명회가 보상금과 이주대책 등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주민들은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후 주민들이 1년여 동안 이주대책, 보상이 현실화 등을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대구시와 주택공사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보상 및 혁신도시 건설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토지보상가와 주택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보상은 너무 차이가 난다"며 "엄청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면 주민들은 혁신도시로 인해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혁신도시 건설 주민대책위원회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오는 5월부터 시작될 혁신도시 보상 절차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대구시와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해 온 기존 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의 불신임 투표를 통해 총 사퇴한 상태며 현재 새로운 위원장과 임원단이 구성돼 그동안의 협의내용과 성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류경희 신임 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불신임한 기존 대책위원회와 추진한 내용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개발제한구역 선 해제 후 정당한 보상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올해 내 사업 착공은 불투명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재준(동구4) 대구시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이 혁신도시 조성 추진상황을 시정에 제의해 마련됐다"면서 "최근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임원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가 안 돼 설명회가 무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새 대책위원회의 업무가 정상화되면 주민설명회가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이어 "보상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이 결정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내달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오는 5월 대구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을 거쳐 9월에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김덕용기자 zpel@idaegu.co.kr